

[종합·해설]

정부 지방발전 보고회… 지역 현안 어떻게 되나

혁신도시 이전 4개 기관 통폐합 '변수'

문화예술위·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위 등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

21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기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밀그림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해 본다.

◇ 혁신도시 조성=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기업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등을 아직까지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통폐합에 따라 타 지역 혁신도시로 넘어갈 경우 해당 광역자체에서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업도시 조성=정부가 기업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타 기업도시에 비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무안·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해 시행자·자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서는 자체 간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때 따라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는 데이다.

당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등을 아직까지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통폐합에 따라 타 지역 혁신도시로 넘어갈 경우 해당 광역자체에서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를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업도시 조성=정부가 기업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타 기업도시에 비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무안·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해 시행자·자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특히 한전과 한전 출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화가 백지화된다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기업 가운데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정도라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통폐합되는 공기업에 대해

21일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지방이전 조건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현지 설명회. <광주일보 자료>

해양·항만·식의약품 등 5개 기관 업무·인력

연내에 광주시·전남도 이관

인건비 정부 지원 등 난제 수두룩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 안으로 국토·하천·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과 업무가 광주시와 전남도로 이관된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8대 특별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천465명, 11개 항만청 산하 1천456명, 6개 지방식약청 산하 인력 630명과 업무를 각 자체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 항만, 식의약 품 등 3개 분야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이관 대상과 업무

가 당초 요구했던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그치는 데다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짐

이에 따라 예산지방국토 관리청 광

주국도사무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목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5개 기관의 업무와 인력 600여명이 시·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이동될 주요 기관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서부지방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

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의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뚫다는 것이다.

시·도는 우선 현안 업무와 밀접한